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숲 관련 정책 추진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2018.1.30.

경기도 공원녹지과 도시녹지팀
2018.1.11.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에 도움을 주는 도시숲
자료: 산림청(2017), "산림청, 도시녹화운동으로 올해 도시숲 160ha 조성", 11월 27일자 보도자료.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의 핵심은 도시숲*을 확충하고, 외곽 산림을 생태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내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바람길을 확보하며, 대기 정체를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조기에 분산시키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이 도심보다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낮다.

먼저 생활권 내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도시별 형태, 녹지 규모 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체계'를 정립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폭염 해소 등을 위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저감숲, 재난방재형 숲 등 '목적형 도시숲 모델'도 개발된다. 2020년까지 지방정원 20곳, 민간정원과 공동체정원 100곳을 등록·조성하는 등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원도 확충된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과 외곽 산림의 생태적 관리도 강화되는 데, 도시숲의 조성에서 활용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별 적정 도시숲 총량의 제시 및 유지·관리하는 방안도 모색되며, 차별화된 도시숲 관리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도시숲이 지속가능하게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도시숲 관련 민간단체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활성화한다. 그린 인프라 정책과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나아가 도시숲의 조성·활용·관리를 포괄하는 법률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공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의 전문적 자문에 응대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생태적 리모델링 필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실태 조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시민의 건강 증진, 정서 함양 및 체력 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되고 있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는 것으로 공원, 학교 숲, 가로수, 친수 공간 등이 해당(자료: 산림청, 산림인접용어사전)